

규제자유특구 내일 시행... “지역색 담은 발전 이뤄야”

부산-블록체인, 광주시-자율주행
경남-무인선박, 강원-데이터산업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활로 모색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창출 기대를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신청 지자체 단체들이 많은 애로를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영선 장관 주재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각각 거쳐 최종 지정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월 공포한 바 있다.

◆신청 지자체들 “획기적 규제완화” 한 목소리

“부산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를 신청했는데, 특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호화폐와 관한 ICO(가상화폐공개)도 전혀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관들이 두루 모여있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를 신청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 부처들의 시각이 만만치 않아 협력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ICO를



규제자유특구제도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됨에 따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통해 운영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면 암호화폐뿐 아니라 연관 산업,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20km이내의 수소저속자율주행차로 한정했다.

광주시 손경중 전략산업국장은 “저속자율주행차는 골목 청소나 간이 운송 등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서 “도로교통법이 20km이내를 저속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20km 이내는 자율주행차 규정도 없어 이를 충족하면 자율주행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폐쇄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

스트 메카’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의 BRT 도로를 이용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관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해 이번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산업을 타격받으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경남도는 무인선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인선박에 대한 스펙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고, 이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이점에 새롭게 상용화의 기반을 지역특구를 통해 다져나간다는 게 경남도의 생각이다.

최근의 대형산불로 지역 전체적으로

상심이 큰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 데이터산업 관련 지역특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 관련 부처·국회 등과 “적극 협의” 약속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 일은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와 상의하고, 해당 부처와도 논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지역특구) 선정은 중기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또 이것이 얼마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지역에는 훌륭한 수준의 연구기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결해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내느냐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는 이를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한다. 또 국무총리가 특구위를 주재해 5월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7월말께 특구를 지정한다. /김승호 기자 배한남 수습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소상공인 힐링-리본캠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상공인 힐링-리본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캠프는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 후원으로 지난 12~13일, 13~14일 두 번에 걸쳐 경기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간 진행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건강관련 인기작가인 오세진 강사의 ‘행복의 성형’, ‘내몸 바로살리기’ 등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의 의미

를 되새기고, 팟캐스트 ‘마케팅 어벤저스’ PD인 강혁진 워크베터컴퍼니 대표로부터 중소기업인 맞춤형 마케팅 사례와 같은 특강이 펼쳐졌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캠프를 올해 총 6회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까지 3회 캠프를 끝냈다. 캠프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경영인 경우 가족도 동반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육실·주방 청소는 ‘대림 나노케어’로!

대림바스, 신개념 홈케어 관리서비스

대림바스는 육실과 주방 제품을 손쉽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신개념 홈케어 관리서비스 ‘대림 나노케어’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대림 나노케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서비스닥터가 직접 방문해 미국 드라이트리트사와 공동 연구개발한 약품을 이용해 육실 위생도기, 샤워부스, 유리, 수전, 주방 싱크대 상판 등 육실과 주방의 제품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현장에 맞는 서비스 상담과 함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팁 뿐만 아니라 3년 애프터서비스(A/S) 보증을 통해 차별화된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노케어는 연잎이 물을 튕겨내는 연잎효과를 이용한 코팅기술로 자재의 미

세한 기공 사이에 나노입자 수준의 코팅제가 뿌리내려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특히 각종 오염 차단, 세균 등의 번식을 막는 항균 효과, 제품 내구성 강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대림케어는 나노케어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5월 31일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육실 1실의 경우 37만원 상품을 31만4500원에, 주방 상판은 32만원에서 27만2000원에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육실 1실과 주방 상판의 세트 제품도 함께 선보이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발매트 또는 대림바스 필터사워기를 선물로 준다. /김승호 기자

갑자기 아픈 강아지, 동물병원에 어떻게 가야하지...

“간편하게 부르는 ‘펫택시’로 걱정 마세요”



박나라 나투스핀 대표 / 김승호 기자

도전! 스타트업

나투스핀 ‘펫택시’

사람 아닌 반려동물 위한 이동수단
고객회원 1만명·재이용률도 85%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일명 ‘강아지택시’, ‘펫택시’로도 불리는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펫택시(PET TAXI)’을 선보이고 있는 나투스핀과 박나라 대표가 주인공이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일반택시는 승차거부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캐리어가 없는 승객에 대해 (일반택시가) 승차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다. 캐리어가 있어도 태우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반려동물과 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 이동수단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시작한 일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아지 택시 ‘펫택시’는 이렇게 탄생했다.

2016년 창업 당시엔 운행 차량이 한 대였으니 시작은 말 그대로 미약했다. 박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공동대표의 차가 ‘펫택시 1호차’였다.

펫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또 이를 알리기 위해 홍보 등을 손수 할 수밖에 없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해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존 택시업계의 차가운 시선을 넘어야 했다. 카풀 등 새로운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뜰이나 택시업계의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기도 했다.

“택시업계에선 자신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여서 많은 논의 끝에 전혀 다른 시장으로 인식을 해줬다. 감사한 일이었다. 택시가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지만 ‘펫택시’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부과한다. 물론 반려동물 없이 사람만 타는 것은 불법이라 안된다. (웃음)” 박 대표의 말이다.

나투스핀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강아지택시가 입소문을 타고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결국 서비스를 합법화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도 국

회를 통과해 법적 기반도 다졌다. 지난해 3월의 일이다.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부과하는 펫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선 다소 비싸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한 일반 택시 요금은 3800원인데, 펫택시 기본요금은 1만1000원부터 시작한다.

박 대표는 “일반택시요금과의 기본요금 차이(7200원)는 반려동물 털 제거, 살균 등 차량 관리비용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이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다. 10km를 이동하기 위해선 약 2만원대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처럼 카드나 현금 등 모두 가능하다.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펫택시는 출발지나 도착지가 수도권이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여행 등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도 펫택시를 이용해 편도요금을 내고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갈 수도 있다.

입소문이 나고 이용객이 늘면서 펫택시업은 어느새 고객회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이용률도 85%에 달한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프리랜서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펫택시도 80대 정도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운행차량의 10% 가량을 법인택시로 채울 계획이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 등을 대비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승호 기자